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

보육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성장친화적인 복지,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시작하여 보육의 기회균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육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 등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보면 단순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가족지원정책 및 포괄적 사회정책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유급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차원에서 취업모·맞벌이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도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출발선상의 평등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보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사랑플랜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부터는 수요자 중심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아울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서민까지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정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육 수요 및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응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소득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맞벌이 가구 등 중산층의 보육정책 체감도가 낮으며,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 등 다양한 주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층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한 충족,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보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해 특별활동 관리방안 마련, 부모의 선택권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은 보육정책을 구성하는 세 축인 부모, 어린이집, 정부가 합심하고 노력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장에서도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우리나라 미래 자원인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